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99-220021-14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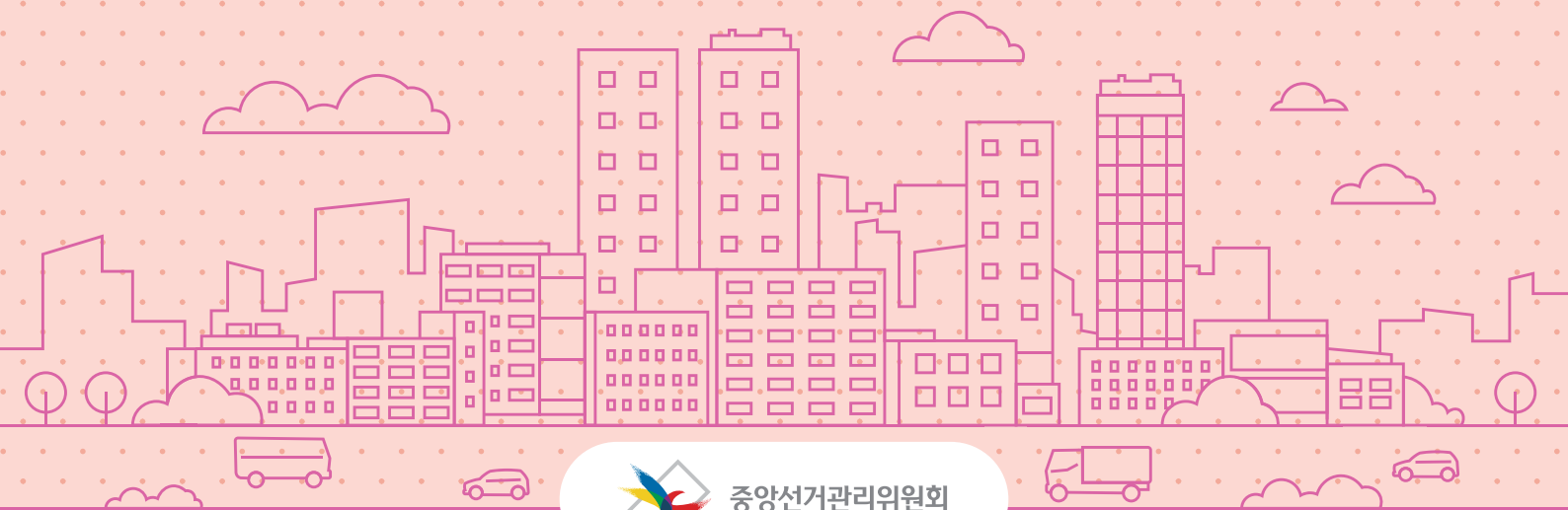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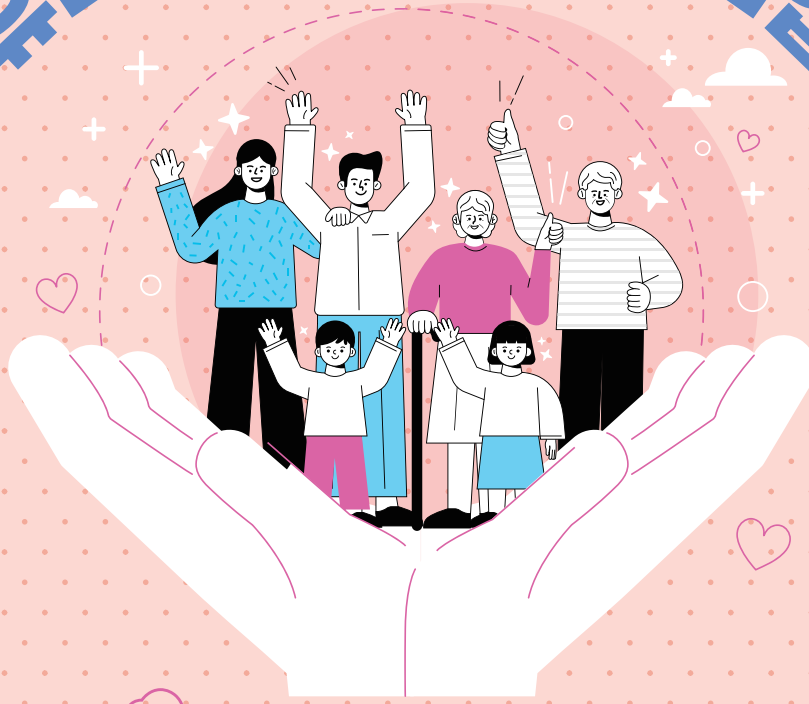
#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Contents | 우수상

## ● 교육/인적 자원 분야

- 1. 징검다리 보육으로 저출산 고령화 해결! 08
- 2.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방 거점대학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개설 증대 09
- 3. 대졸 미 취업으로 인한 인력 손실을 막자 10

## ● 보건의료/환경 분야

- 4. 의료시장 개방이 필요합니다 11
- 5.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12
- 6. 전국민 몸과 마음 건강 움직임(몸과 마음을 다루는 표현예술 활동) 13
- 7.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기업의 주도적 움직임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14

## ●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 8. 차고지증명제 전국 시행 15
- 9. 농촌지역에 수도권 은퇴자를 위한 공공주도의 실버 타운을 건설하자 16

## ● 재정/경제/복지 분야

- 10. 신혼부부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및 주담대 고정금리 지원 17
- 11. 주차 난 해소 방안 및 세수 확보 정책안 18
- 12. ‘범죄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출소자 재범방지 공약 제안 19
- 13. 느닷없이 예고없이 근거없이 바뀌는 가계부채 정책 개선 20  
(가계대출 규제 근거(LTV, DSR)가 법에 근거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금융생활의 안정성 및 예측성 제고)
- 14. 사랑(40), 부, 희망 어서 오공(50) 정책! 22  
: 40, 50 세대의 노후걱정, 부모 봉양,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및 한국판 401k 도입을 제안합니다

# Contents | 장려상

## ● 교육/인적 자원 분야

1.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서비스 신설 26
2. 환경 교육 활성화 방안 27
3. 여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설립기준의 지역별 차등이 필요합니다 28
4. 저출산 환경 개선 및 주부, 노인, 은퇴자 일자리 창출 29
5. 인문사회계열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시시오 30
6. 출산장려 대안 31
7. 노인시니어 일자리 불평등해소에 힘써주세요 32
8. 대학 연간 등록금 백만원으로 인하 33
9. 청년일자리창출 34

## ● 국방/통일/외교통상 분야

10. 군인처우개선 35

## ●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11. 시골캠핑 설립방안 36

## ● 보건의료/환경 분야

12. 미개발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리얼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 건립 제안 37
13.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 38
14. 국가의료체계 개선 - 공공의료원 확충 39
15. 탈플라스틱 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 40

### ● 산업지원/건설교통 분야

16. 전기차 급속 충전소 확충 및 정책 확립	41
---------------------------	----

### ● 재정/경제/복지 분야

17. 공정한 이자율 적용 및 운용방법 개선제안	42
18. 한부모 다자녀 지원정책	43
19. 임산부 배려석, 일반인도 앉을 수 있는 여기!! 캠페인 제안	44
20. 첫 아이를 위한 난임 시술비 무제한 지원 및 현실적인 난임 남성 시술비 지원	46
2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부과	47
22.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도로정비 및 대중교통 확충	48
23. 비대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개설	49
24. 저출산장려 지원금	50
25.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지원 정책	51
26.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 개설	52
27.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변화	53
28. 장애아들에게 뛰어놀 공간을 주세요	54

### ● 정치/행정/사법 분야

29. 살인, 성폭행범 인생 아웃(형사소송법 개정 :유기징역제 전환 및 사형제 실시)	55
30. 성범죄 2차가해 피해자 보호	56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 우수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보건의료/환경 분야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재정/경제/복지 분야





# 우수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징검다리 보육으로 저출산 고령화 해결!

### [제안이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보육은 부모나 보육기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근무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출퇴근과 자기계발 시간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기존 보육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시간을 책임질 징검다리 보육시스템 필요

### [주요내용]

징검다리 보육을 위한 어르신 - 영유아 원클릭 매칭시스템 마련

- 보육기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틈새시간을 메꿀 징검다리 보육이 필요한 가정과 인근의 60대 젊은 어르신과 매칭으로 해결, 비용은 국가, 지자체, 수요자 분담
  - \* 최저임금 고려 시간당 15천원 내외, 국가(20%), 지자체(30%), 수요자(50%) 부담
- 현재 보육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워 등하원 도우미, 가족, 사교육 등에 의존하는 틈새시간을 정부와 사회가 담당하여 영유아 가족의 고충을 해결
  - \* 어린이집 종일반은 19:30,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7:00 (방학 중 15:00) 종료되나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할 때, 부득이 다른 도움에 의존해야 함
  - \* 특히 갑작스런 야근, 아이의 질병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회사 연차 등을 내야 하는 어려움
- 징검다리 보육 주요내용(1) : 은퇴한 60대 젊은 어르신 아이돌봄 도우미화
- 징검다리 보육 주요내용(2) : 징검다리 보육 원클릭 매칭 시스템 구축
- 징검다리 보육 주요내용(3) : 경로당 시설 개선을 통한 징검다리 보육센터화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하반기 4곳 시범실시 비용 4억원 내외 (아이돌봄 희망자 50명 X 36명 X 4곳 X 6개월 = 4.32억원)

# 우수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방 거점대학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개설 증대

### [제안이유]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이 화두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증가(스펙쌓기 : 공모전, 자격증 취득 등)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대학구조조정의 방향의 한 축으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개설 증대를 제안합니다.

특히,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공공에서 필요한 미래인재양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도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양극화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거점대학의 위상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거점 학과 개설이 필요합니다. 취업과 연계된 계약학과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거점에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개설하면 지방의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 대학만 선호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20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청년인구의 균형분포가 중요하고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은 일자리와 상관관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 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 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우수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대졸 미취업으로 인한 인력 손실을 막자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나 인턴을 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묻혀버리는 인재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이것은 국가 장래나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게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부처나 교육부에서 대졸자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어린 학생들을 지도 및 상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나라를 젊어지고 나가는 어린 중,고교 학생들에게 인생 향로를 정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무엇을]

졸업한 대졸자들이 중,고교 학생들에게 학업 상담 및 진로 상담을 하는 부서를 신설하자

### [어떻게]

졸업을 앞둔 예비 대졸 학생들을 공모하여 각 학교로 배정을 하자

### [언제까지]

최소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소요예산]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인턴 채용 시 지급하는 비용을 참조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원조달방안]

대기업이나 민간재단에서 사회청년층 및 미래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부금 형태로 조달하며 그 외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인력들이 사회에 나와 이 나라와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전에 절망과 자포자기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파하여야 합니다. 정부도 그런 젊은 층을 흡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중,고교생들이 진로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데 있어 대졸 선배들을 롤 모델로 더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 졸업과 동시에 미취업자로 분류되는 젊은 층을 흡수하여 사회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순환 정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정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우수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 의료시장 개방이 필요합니다

###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일이 생기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임합니다. 판데믹으로 의료 체계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조차 의대생들까지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장이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의료진의 배경이 다양화된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을 인질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공약을 추진하신다면 또 다시 의료진의 파업이 일어나겠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 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상되는 장점]

첫째, 출신의 다양성을 통해 폐쇄적으로 멍치는 집단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해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 점점 증가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귀화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 우수한 해외 인력의 유입이 가능해집니다.

### [시행방안]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예비시험 폐지.

전 세계적으로 예비시험까지 두면서 해외 의료 인력의 유입을 막는 폐쇄적인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 보기 힘듭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 능력을 검증받고 해당 국가의 대학 졸업생들과 동일한 시험을 합격하면 의료인으로 활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인 국가고시가 응시자의 능력을 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더 복잡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외 인력들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예비 의료인들과 똑같은 시험을 거쳐 합격하고 이후에는 동일한 수련 과정을 거치는 등 진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소요예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해외대학들의 목록이 있고, 해외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검증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준비해야할 내용이 없으므로 소요예산은 0원입니다.

# 우수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청년 무연고 사망은 최근 3년 새 58% 증가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소통이 단절되고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생활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돌봄 시스템은 주로 영유아와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나, 정책은 보통 중장년층에 제한되어 있어 증가하는 청년 고독사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 고독사는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기에 물질적, 심리적 빈곤에 처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정책을 제안합니다.

### [청년 심리 및 일자리 상담 제도]

스웨덴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국가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직장을 잃으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자를 위한 ‘개인별 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6주에 한 번씩 직업 트레이너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센터의 매니저는 기업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기회를 찾아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실업자들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 스웨덴 사례와 같은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취업과 심리 컨설팅이 진행되어 건강한 청년 양성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 [시체 부패물 처리에 관한 법률]

두 번째로 고독사한 청년의 존엄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독사의 경우, 오랜 기간 방치되어 시체가 부패하여 오염물이 흘러내리면 고인의 흔적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에 고독사한 시체 부패물 또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고인의 마지막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수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 전국민 몸과 마음 건강 움직임 (몸과 마음을 다루는 표현예술 활동)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부터 커뮤니티댄스를 배웠습니다. 코로나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움직임이 왜 도움이 되었을까 다양한 책과 자료를 찾으면서, 전국민이 춤을 추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게 되며 이 제안을 드립니다.

트라우마 전문 학자 베셀 반 데어 콜크는 몸이 아프면 단순한 증상 뿐 아니라, 심리적인 양상까지 잘 살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초비상사태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백신접종률이 대한민국이 1위이며, 국민은 국가 방침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청과 법원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가정폭력과 학교 폭력이 몇 배수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의 형태는 코로나 이후 전 국민의 트라우마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년 실업, 인구 감소는 국가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 편안한 국가가 된다면, 인구는 저절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다는 의미가 돈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만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임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서울 시내의 많은 학교들은 교실이 비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기 때문이지요. 그 교실에서 마을 교사들이 움직임(춤, 무용, 몸과 마음을 다루는 표현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시범마을의 사업을 마친 후, 서울과 전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면 어떨까요?

이미 영국, 독일 내에서는 커뮤니티 댄스 센터가 운영되어,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로 TFT와 시범사업을 만들어주십시오.

# 우수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기업의 주도적 움직임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희망공약 제안하는 이유]

지구에 사는 어느 누구도 기후변화 위기의 영향을 피해갈수 없습니다.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더 이상 환경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개인의 노력을 넘어선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배출량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산업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대신 사회 다른 구성원들과 공존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기후변화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정책목표]

- (1) 헌법 제35조 1,2항에 명시된 환경권을 보장합니다.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2)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한 재점검(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할당량 재설정)을 실시하여 원래 취지에 부합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룹니다.
- (3)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기후위기 심각성, 긴급성 알림)하여 기업,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의논하고,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4) 노동권(국가가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을 보장합니다.

### [정책주요내용]

- (1)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한 재점검(제3차 계획기간 : 2021~2025년의 배출권할당량 재설정)을 실시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배출권으로 경제적 이익 취득 방지 목적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2030년 감축목표를 40%이상으로 하여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을 의무화

# 우수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 차고지증명제 전국 시행

### [제안이유]

거리미관개선, 불법주정차로 발생하는 문제(소방차 구급차 진입 불가 등) 차단, 교통난 해결, 교통사고 예방, 주차문제 해결, 보행권 보호

### [무엇을]

차종에 상관없이 차고지를 증명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

### [어떻게]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함께 공영(민영)주차장 공급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건물 건축 시 주차지 필수 요건 도입

### [자세한 설명 & 재원조달방안]

공영주차장은 연/개월 단위 요금제로 시행. 공영주차장이 마땅치 않으면 유료주차장에게는 면세 혜택을, 새로 짓는 주차장에게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통해 주차장 수 증대.

주차장 투자자와 토지주 입장에서는 공실 걱정 없고 수익률이 안정적이라 짓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주차장은 공영·민영 상관없이 모두 지정제로 운영.

불법주정차한 자에게는 지금보다 많은 과태료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

주거건물 건축 시 건축 범위 내에서 주차부지 확보할 것을 필수로 지정. (또는 일정한 면적 비율 제시) 아파트, 빌라 등 다세대 주거지 경우 주차 지정제 도입. 세대당 차량 수 제한하여 추가 차량은 금액 추가 납부.

대중교통은 이미 잘 시행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우수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 농촌지역에 수도권 은퇴자를 위한 공공주도의 실버타운을 건설하자

### [제안이유]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을 쓰고 있으나 이는 다시 주택난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므로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병용이 긴급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중앙정부기관(행정복합도시)과 공공기관(혁신도시)을 이전했으나 종사원은 여전히 서울에 남고 이전부지는 더욱 고밀 개발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한 예로 한전의 경우 이전부지에 105층의 건물 외 5개의 빌딩(50층 3개로 조정 중)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그 고용유발인구가 121만5천명으로 기존 한전고용인구의 50여 배가 넘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이전 정책보다는 인구를 직접 이전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 이의 유효한 방안으로는 농촌에 수도권 은퇴자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공공에서 제대로 건설하여 저렴하게 분양, 임대하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주택난을 완화하고 균형발전과 노년층의 후생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주요내용]

현재 수도권 은퇴자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태어나 취업과 교육 등을 위해 이촌향도한 세대로서 농촌에 대한 향수가 크며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56.3%가 귀촌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리고 이들의 78.2%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이주의 경우 수도권 주택난완화에 크게 기여 실버타운은 고령화시대 선진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36개소 수용인원 7,925명으로 고령인구 850만 명의 0.1%로 태부족이고 민간에서 운영하여 시설도 미흡하고 고액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공(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된 은퇴자타운을 건설하여 저렴하게 분양, 임대하면 큰 호응이 예상. 은퇴촌 입주 위해 수도권 주택 처분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하고 농어촌주민소득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 강구 필요

###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각도 1개소 목표로 점진적으로 건설하고 임기 내 1개소 건설 입주완료  
국공유지활용, 지자체와 함께 건설하고 원가 분양하면 소요예산은 크지 않음

#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신혼부부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및 주담대 고정금리 지원

### [제안이유]

신혼부부들 중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부부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도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려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한 채의 집만 있는데, 올라간 집값으로 인해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내집마련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담대 금리가 너무 말도 안되게 오르고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재원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어야 출산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발하려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에게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제혜택과 금리 인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무엇을]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10년)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및 주담대 금리인하

### [어떻게]

세금 감면 혜택 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혜택

- ① 신혼부부 연말정산 시, 200만원 공제 혜택
- ② 주택담보대출 10년 동안 2% 고정금리

### [언제까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한 이후 10년 동안

### [소요예산]

금리에 따라 1가구당 100~150만원

### [재원조달방안]

종합부동산세 또는 국민연금

#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주차난 해소 방안 및 세수 확보 정책안

### [정책 제안 근거]

1인 1차량의 시대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과 국가의 자원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을 제안합니다.

### [정책 내용]

인도 구역 가로수 사이 보도블록의 일정 구역을 제거하고, 그 구역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해당 구역은 도로 구역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으로 주관사를 선정합니다.

이후 일반 시민에게 주차권을 판매합니다.

1년 / 3년 / 5년 형태로 계약 체결합니다.

주차권 판매는 청약과 같은 원리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1인 주차권은 2~3개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합니다.)

주차권은 사회통념상 주차 금액의 60%~70%를 받습니다.

주차권자는 수익에 대한 월 수익을 주관사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 혹은 수익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 [방법]

주차를 한 시민은 통합 키오스크 혹은 앱을 통해 주차 QR인증을 마칩니다. 주차 목적을 마친 때 통합 키오스크 혹은 QR 결제를 진행합니다. 인증을 마치지 않은 경우 혹은 불법 주차를 진행한 시민이 발생하면 주차권주에게 주차 비용의 가중 결제 요구 권한을 갖습니다. 주차권 영역이 아닌 구역이나 주차권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 [정책 소요시간 & 자원조달 방안]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과정 및 추가 입법 마련안으로 1~2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QR 인증관련 앱 개발에 따른 비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민 주차권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예산은 그 비용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봅니다.

#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범죄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출소자 재범방지 공약 제안

저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자원봉사 조직인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로 전국 각계 각층의 자원봉사자 7,000여명이 위촉되어 출소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알선, 생활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출소자 재범방지 사업에 관한 공약을 제안합니다.

① **법무보호복지사업 활성화** : 통계청 조사결과 범죄발생이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이고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연간 903억 원이 절감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재범률은 25.8%지만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수혜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0.41%에 불과하여 법무보호복지사업을 활성화해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② **‘고위험·중독 범죄자 처우시설’ 설치** : '2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고위험·중독 범죄자의 재범률은 65.7%로 일반 범죄자보다 높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험·중독범죄자는 무연고, 가족인수 거부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들이 많아,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처우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③ **출소자 취업지원사업 확대** : 취업지원사업은 취업설계부터 능력개발, 취업성공, 사후관리까지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로, 사업수혜를 받은 자들의 재범률은 약 1%로 재범방지 효과가 탁월합니다. 하지만 수혜자는 출소자 대비 1/10 수준이며, 출소자 고용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누구든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범방지 사업은 “범죄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느닷없이 예고없이 근거없이 바뀌는 가계부채 정책 개선 (가계대출 규제 근거(LTV, DSR)가 법에 근거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금융생활의 안정성 및 예측성 제고)

### [제안이유]

현행 가계대출 규제의 근거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기껏해야 시행령, 통상적으로 장관 고시, 훈령이나 행정지도로 운영되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한 국민의 의견 수렴 및 국회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치세력이 바뀔 때마다, 규제의 주요 내용이 너무나도 쉽게 바뀌는 상황

또한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은 사실상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사안임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고시나 행정지도에 근거하며, 현행법에서 하위 법령 등에 규제를 위임하는 위임 근거도 포괄적/추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등 위헌소지 또한 상존

### [주요내용]

(대선 이후, 여야 합의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하여 처리, 또는 정부입법 추진)

#### (1) 가계대출 규제근거와 주요 내용을 금융관련 법에 명시

국회 의결 없이는 가계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도록 함  
(작년 말 대출절벽, 대출규제가 느닷없이 바뀌어서 수분양자들이 입주 못하는 사례 등 즉흥적이고,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방지 가능)

#### (2) LTV, DSR 등 사실상 국민이 대출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LTV를 0%로 설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령, 고시, 행정지도가 아닌 법에 근거하도록 하여, 침익적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되도록 금융관련 법 개정

또한, 법에 명시될 경우 LTV, DSR, DTI 등 규제 변경 시 변경의 산출근거를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 규제의 근거가 감이 아니라, 수학/통계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산출되도록 할 수 있음

(15억 초과 주택은 왜 LTV 비율이 0%여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함)

### **[소요예산]**

건의사항은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 공무원의 법 개정 작업 사항이므로, 국회의결이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은 없음

### **[재원조달방안]**

해당 없음

# 우수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사랑(40), 부, 희망 어서 오공(50) 정책!

: 40, 50 세대의 노후걱정, 부모 봉양,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및 한국판 401k 도입을 제안합니다

### [제안이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중장년 취업자 수 감소,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으로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청년들... 노인도, 중장년층도, 청년들도 누구 하나 편한 사람이 없고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요즘 중장년층 지원을 통해서 노인 문제, 중장년 실업문제,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무엇을]

첫째, 6070 이상 세대의 부모를 두고, 1020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본인의 노후는 뒷전이고 직장 에서 퇴직 요구 압박에 시달리며 힘든 하루하루를 겪고 있는 4050 세대에게 재정적 자유를 얻도록 도와서 부모 봉양, 본인 노후, 자녀 양육 삼중고에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당파를 초월한 국익을 위한 장기 지속 공약으로서 지원 하기.

둘째, 4050 세대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6070 세대를 더 마음 편하게 모실 수 있고, 4050 세대가 청년 세대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를 도와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튼튼한 국가를 만들고 튼튼한 국가는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에 큰 사회적 선순환이 예상됨.

### [어떻게]

소득세의 95% 감면과 감면한 세금을 지난 100년 동안 우상향 해온 안전한 미국 S&P500, 나스닥100 ETF에 장기투자를 하도록 지급하는 것을 통해서

### [언제까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처럼 영구적으로 존속해서 모든 미래세대에게까지 계속해서 해당 정책의 혜택이 이어져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요예산]

자신의 급여에서 원래 나가야 하는 세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정부에서 추가로 지출해야 할 예산은 없음.

### [재원조달방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국토보유세 신설, 기업들의 법인세를 없애고 법인세로 낼 돈을 대신 해당 공약의 재원으로 활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국방/통일/외교통상 분야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보건의료/환경 분야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재정/경제/복지 분야  
정치/행정/사법 분야



#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서비스 신설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엄마, 아빠 나라는 달라도 현재 살아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며 꿈을 키워야하는 아이들이 편견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면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말이 서툰 부모님 때문에 한글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 미취학 아이들의 한글교육 한국의 의식주 문화를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게 지역 동사무소나 소아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학교 입학해서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확립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로 예민한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관내 지역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좋겠어요.

지역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 다문화 가정아이들 상담센터 특별부서를 만들어 당장이라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소중한 보물이잖아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정신적 복지와 교육을 통해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서 어른으로 성장해 글로벌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환경 교육 활성화 방안

### [제안이유]

화력 발전소와 현대제철이 있는 충남이 탄소 배출량 전국 1위란 불명예를 가지고 있으나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탄소배출보다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미세먼지에 관심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충남교육청 탄소중립학교 365 실천 운동(3가지 중이기 6가지 늘리기 학교별 5대 실천 사항)을 2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탑다운 방식이라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환경 운동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니 학교(중등)에서는 관심 있는 몇몇 교사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유지될 뿐 학생들에게 전혀 투입되지 않습니다. 환경 운동의 첫 번째는 인식개선이고 인식개선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에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주요내용]

- **학교** : 창의적 활동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 봉사활동 시간을 환경 활동시간으로 의무 시간 편성 해주세요. 환경동아리 운영 시 지원금을 지금보다 더 늘려 학생들의 바텀업 활동을 장려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환경 교육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 **교사** : 환경에 관심있는 교사들에게 이벤트성이 아닌 심층적인 교사 직무 연수를 받게 해주세요. 환경에 관심이 있어도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교사 대상 연수가 별로 없고, 있어도 단기로 있어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환경 교육을 하기 어려워 1회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포털에 연수가 있어 활용하기는 하나 다양하지 않습니다.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사 과정처럼 체계적인 교사 연수를 만들어 주시거나 환경에 관심있는 교사들에게 환경교육사 과정을 개방하면 실질적인 연수 효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지역사회** : 청소년 수련관, 평생교육원에 환경 관련- 찾아가는 환경 교육 참여 학교수 증설.

### [언제까지]

22년 하반기

#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 여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설립기준의 지역별 차등이 필요합니다

---

여주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교통편의 시설과 복지시설이 충족되는 이남 지역에 비해 강북지역은 현재 학교 배치의 불균형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북의 오학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는 주거시설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학초등학교를 배제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아예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이남지역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학교 설립규정만을 운운하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급속도로 감축되고 있는 이 실정에서 80~90년대에 설정된 학교설립 기준은 현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설립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또 비율을 고려하여서 학교설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기도 학교 설립기준이 완화된다면 시청 문의결과 시청의 지방채발행 및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 사업자의 기부채납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등을 고려해주셔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저출산 환경 개선 및 주부, 노인, 은퇴자 일자리 창출

### [제안이유]

저출산이 심각하여 국가 존망에 영향을 끼칠 지경에 이르렀으나 정작 아이를 낳아도 돌봄 시설 및 환경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부, 노인, 은퇴자 등 수많은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제 2의 직업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합니다.

### [제안내용]

동사무소(주민센터)마다 어린이(유아) 돌봄 시설을 의무 설치하여 거주민 누구나 필요시 아동을 쉽고 안전하게 맡기고 자신의 일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돌봄 인원은 아동 돌봄 자격조건을 갖춘 감독자 휘하에 은퇴자, 노인, 주부들 지원자 중 선발하여 배치하되 유관학과 대학생 및 중,고생 알바, 기타 자원봉사도 가능토록 유연하게 대처함.  
(최저시급 및 4대 보험 보장)

### [재원조달방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각종 비용에서 일정 부분 절감하여 투자 및 비효율적이고 일회성인 신호등 지킴이 등과 같은 일자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용.

주민센터에 돌봄시설 추가는 신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설계 시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주민센터는 구조개선을 통해 돌봄시설 확충. (연말 불요불급한 보도블럭 교체비용 등을 여기에 투자하면 더 좋을 듯)

### [첨언]

출산 시 현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육아에 따른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국가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인문사회계열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시요

1. 현행 수능 수학 체계에서 수학 가/나 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일지 몰라도, 수능 수학 통합은 학문 간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극명한 수학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수능 수학 통합으로 인해 진로 분야에서 수학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과 계열은 오히려 이전보다 적게 공부하고도 더 높은 등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 수학 학습량이 감소하게 되고, 진로 분야에서 수학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문과 계열에서는 반대로 수학 학습량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수포자 문제가 심화되고, 수학 사교육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공계에서도 이 통합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본래 수학 가형에서 필수로 포함되었던 기하 과목이 선택으로 빠지고,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이 기하가 아닌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어 기하 과목의 중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 인문과학, 사회과학대학을 지원할 때 수능 사회탐구 과목의 필수 선택을 의무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인해 이과학생들이 자신의 수능성적보다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 높은 대학의 문과 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이른바 침공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어차피 수능은 수험생들을 줄 세운 다음 성적 순으로 대학 가라는 제도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묻곤 하지만, 침공을 통해 문과 학과를 진학한 이과 학생은 절대다수가 반수, 복수전공을 목적으로 온 것이므로 해당 학과에 있어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고, 이는 인문학, 사회과학 인재 육성의 기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과 계열 학과의 사회탐구과목 필수 지정 의무화를 제안드리는 바이며, 이미 이과 계열 학과의 경우 대다수가 과학탐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였습니다.

#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 출산장려 대안

---

### [제안이유]

급격한 출산감소와 노령화로 나라 존폐위기 대책

### [주요내용]

- ① 출산 전까지 태중아이 중증의료 발생 시 전액 지원(출산 전 월5만원 X 10개월 = 50만원)
- ② 출산 후 산후 도우미 1개월 무상지원(도우미 1개월 = 50만원)
- ③ 세 자녀 자동차 구매 시 취득등록세 혜택 - 2자녀 혜택(카니발 기준 약200만원 지원)
- ④ 세 자녀 이상 가정은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현행 무주택일 경우만 해당 - 1주택 보유시)
- ⑤ 초·중·고 의무교육으로 면제
- ⑥ 두 자녀 이상 대학등록비 무상지원(첫째는 입학년도, 둘째는 2년까지 등)
- ⑦ 두 자녀 이상 가정 여행 바우처 지급(4인가족 10만원, 5인가족 20만원/ 3개월 마다)
- ⑧ 대중교통 지하철 유아 및 유모차 칸 신설(수유로 인해 여성과 12세 미만 아이만 탑승)



#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노인시니어 일자리 불평등해소에 힘써주세요

노인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내부 갑질이 존재함을 새삼 깨닫게 돼요. 만약 내 업무가 아이들 동화구연이라 하면 동화구연에 전념하여야 하지만 동화구연이 아닌 청소라든지 기타 잡무들을 보아야 한다면 이건 이치에 어긋날 수도 있다 생각해요.

또한 일이란 것은 내 할일을 하는 것이지 내 업무 외의 것을 아래 사람 부리듯 시킨다면 이것은 참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시니어라하면 노인들을 말하는데 노인들조차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에서 얼마나 큰 차별과 보이지 않는 내적 폭력을 당할까요.

이것은 예산적이고도 재원조달적인 방법이 아니라 생각해요. 근본적, 그러니깐 사회교육적 문제지요. 어린 시절부터 갑과 을이란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사회에 나와 당하다보니 몸에 배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하오니 교육 예산에 상하존중, 상호배려, 차이점인정, 왕따예방, 왕따방지 같은 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한다고 봅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개개인의 인성이 중요하죠. 예전처럼 강압에 의한 교육을 넘어 이젠 방조까지 왔으니 앞으로는 방조를 넘어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창의적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많은 예산 투자해 주시길 빌며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을 넣어야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어디 얼마나 넣어서 변화를 시켜야할지는 정부부처의 몫이라 생각하니까요.

두서없는 노인네의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 대학 연간 등록금 백만원으로 인하

---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 중 의식주 외에 가장 큰 것이 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기준 4년제 대학 연 평균 등록금이 673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숙식, 교통비, 교육 기자재 구입 등을 포함하면

적어도 연간 2,000만원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로 원화 기준 4,200만원인 걸 감안하면

소득의 절반가량이 대학생 1인 교육비로 지출되는 셈입니다.

국가재정 예산 편성시 교육비를 우선순위로 하여 단계적으로 연단위 30%씩 인하하면 5년 후에 1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졸업 후에도 채무자가 되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서 등록금 백만원대 인하를 제안합니다.

# 장려상

[교육/인적 자원 분야]

## 청년일자리창출

제 4차산업 특성 상 - 많은 일자리 감소가 발생함에 따라(인공지능 대체, 점포 무인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방법과 이에 따른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내수 진작을 하자는 것에 초점.

기존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는 일자리를 대체하여 근무 시 추가적인 기본 소득 및 기타 인센티브 [추후 추가 가능]를 지급함으로써 추후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전 해주고 - 그냥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 지속적인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초점.

국내 3D 산업에 대한 지속 성장과 그 소득이 외국인들의 해외 유출이 아닌 국내에서 소비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임.

예) 현 중소기업 등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종의 소득+기본 소득, 총 소득 레벨 수준은 추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

(대략 지원금 포함 월300만원에서 - 350만원정도나 최대 4천 정도까지 되면, 청년들도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됨)

### 긍정적 영향

1. 청년들의 질적인 일자리 창출
2. 1번과 함께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
3. 소득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결혼 증가
4. 결혼 증가에 따른 출생아 증가
5. 국내 외국인 상주에 따라 발생 되는 문제점 해결 (폭력, 마약 기타 등)

디테일한 사항은 추후 조사 및 연구하면 충분히 이상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봄

# 장려상

[국방/통일/외교통상 분야]

---

## 군인처우개선

---

공약을 보러 왔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원하는 희망공약은 국방부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국방부 예산의 투명성을 보여 주시고 군대에 처우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군복무 개월수 줄이기뿐만 아니라 군인분들 월급인상이나 직업군인분들 월급인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군 복무 하시는 분들 식사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분들이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들려오는 안좋은 일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분야든 다 중요하지만 군인분들 노력하시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힘들게 일해주는 군인분들 처우 개선에 국방부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드시지만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분들 힘낼 수 있게 공약 좀 만들어 주세요.

제 얘기가 크게 작용할진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든 보시면 잊지 않고 꼭 개선해주세요. 군인분들이 힘이 들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월급인상이나 식사개선 부탁드립니다! 전투복 질도 좋은 걸로 해주세요. 금방 낡는 재질이라서 잘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려상

[문화/언론/관광/스포츠 분야]

---

## 시골캠프 설립방안

---

요즘에 농촌으로 귀촌이나 귀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귀촌이나 귀어를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골캠프를 설립하면 좋겠네요. 시골캠프 설립은 시골에 거점을 두는 도시를 목표로 2030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소요예산은 10억으로 자원조달방안은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고 기업의 후원이나 시민들 후원금을 통해 50%를 조달하여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시골캠프는 말 그대로 귀촌이나 귀어를 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죠. 시골에 빈집이나 폐교를 적극 활용하여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도 지원하고 귀촌이나 귀어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노하우도 전수하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취업이나 일자리도 제공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병원이나 다른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건소나 진료소를 두어 건강도 체크하고 빔 프로젝터나 작은 공연을 선물하여 함께하는 행복도 보고 싶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책을 놓는 도서관 역할이나 EBS와 연계하여 강의를 듣는 공부방의 모습도 그림니다.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들을 초청하여 좋은 강연도 듣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알려 시골캠프가 죽어가는 시골을 살리는 유익한 역할을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제 도시와 시골이 경쟁이 아닌 서로 상생을 해야 살 수 있죠.

그 중심에서 시골이라는 장소가 앞서가며 활기차고 힘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멋진 미래도 그림니다. 시골캠프를 통해 시골에도 매일매일 즐거운 웃음이 넘치고 희망이 가득한 일상을 바랄게요.

#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 미개발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리얼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 건립 제안

### [제안이유]

쓰레기 소각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 [주요내용]

파주시에는 다수의 미개발 반환공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곳을 활용하여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기를 제안합니다.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은 지하에 소각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생태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 더 나아가 관광지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소각장을 최첨단 환경오염제어시설을 갖춘 친환경 소각장으로 적용하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소요예산]

쓰레기 소각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예시]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 국내 예시  
: 충남 아산환경과학공원.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 해외 예시  
: 덴마크 코펜하겐 쓰레기 소각장, 오스트리아 빈의 쓰레기 소각장, 일본 마이시마 소각장.

#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

### [배경]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가족 중 한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들거나 건강검진을 받게 되지만,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이고, 가족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목돈이 들게 됩니다.

현 증상에 맞춰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문제사태의 발생을 예방하여 조기발견과 조기해결을 원조하는 보건소를 잘 이용하는 것인데, 못 사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란 잘못된 편견을 씻어 이용빈도를 높이며, 새로운 시각으로 변모하는 보건소를 누구든지 적은 비용으로 쉽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제안]

#### 보건소의 대한 편견 개혁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 보건소는 이전 보건소의 이미지를 벗고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18개 자치구에서 시행된다고 하던데 차후 지방 보건소에 몇 가지 확충사례를 곁들여 본다면,

#### ① 가족 진료 신청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녀들이 직접 지방 보건소의 홈페이지나 전화상으로 방문검진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진료 제도를 실행! 멀리서라도 가족의 건강을 챙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 ② 확충시간 공고

인터넷 상으로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확인해 보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열린 보건소로 시간을 확충시킨 지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

## 국가의료체계 개선 - 공공의료원 확충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건강보험) 도입 등 국가의료체계를 잘 갖춘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듯이 국내 전체 의료자원의 90%이상을 민간의료 분야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 등에 비협조적이거나 구조적으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경상남도 의료원의 사례처럼 재정 낭비라며 국공립 의료원을 없애는 경우도 벌어진 지자체에서는 더욱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국가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지금의 90%이상 민간의료 분야에 의존하여 민간의료 분야에 예산을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의 일부를 국가의료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여 국공립 의료원을 확충하여 민간 의료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헤아린다면 지금의 의료체계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필요한 예산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임기 5년 동안 진행이 어렵다면 국가 과제로 장기적으로라도 꼭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도 생각합니다.



# 장려상

[보건의료/환경 분야]

## 탈플라스틱 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플라스틱 배출이 세계 3위이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의 탈플라스틱 정책의 지속가능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 [주요내용]

- ①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 포럼이나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효율적인 탈플라스틱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②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 19상황에서 효과적인 탈플라스틱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열고 해커톤 대회로 우수 제안을 선발한다.
- ③ 실현가능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SNS를 통해 공유하고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도 탈플라스틱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2022년말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관별로 탈플라스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수 단체나 개인에 대한 시상이나 표창을 한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생략

### [기대효과]

- ① 탈플라스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깨끗한 환경 선진국이 될 것이다.
- ② 21세기의 핫이슈인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탈플라스틱뿐 아니라 다른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 ③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장려상

[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 전기차 급속 충전소 확충 및 정책 확립

### [제안이유]

최근 대기오염 및 각종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는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되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불편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충전소는 충전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되어 충전소당 충전할 수 있는 실제 소요대수는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주민센터 등에 필수로 5대 이상 설치 할 수 있는 필수 법안을 마련해 주시고, 완속충전소의 경우 충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장기주차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전담 담당 공무원을 다수 선정하여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순히 전기자동차만 생산하도록 장려할 게 아니라, 이후의 후속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을]

전기차 급속충전소 확충

### [어떻게]

공공기관, 주민센터, 구청, 시청, 공영주차장등 급속충전소 5개소 이상 설치

### [언제까지]

임기 내

### [소요예산]

1대당 1,400만원 X 1,000대 = 14,000,000,000원

### [자원조달방안]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 편성 확대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공정한 이자율 적용 및 운용방법 개선제안

### [제안이유]

이자율은 미래에 발생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공정할 때 부실채권은 해소되고 대출선택은 확대되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자율은 과거와 현재를 근거로 신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미래에 적용하다보니 채무자에 따라 어려운 사람일수록 신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 미래에 변제하는 원금 및 이자 중 과하게 납부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인지 채무자의 과거와 현재를 신상필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예대마진율을 기준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차등적용하여 그 평균으로 예대마진율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도 아닌지라 신용이라는 프레임의 역차별 속에 채권자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그 피해는 채무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고 이는 위력에 의한 경제폭력이며 불공정을 넘어선 착취라고 생각하는 데 이유가 있다.

### [주요내용]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채무자는 자신의 신용에 따라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채권자에게 수익이 되는 예대마진율을 고려하여 이자율의 기준을 정하고 채무자는 상황에 따라 부담해야 하며 기존의 신용적용 방법과 잘 병행하여 개선하기로 한다.

첫째, 국가에서 채권자의 대출상품에 따라 보장이자율에 대한 기준율을 정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은 1금융권 5%, 2금융권 9%, 3금융권 15% 등이 있다.

둘째, 채권자(금융권)는 기존대로 신용 기준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한다.

셋째,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을 지켰을 때 채권자는 적정한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이자를 돌려준다. 즉, 채무자가 기준율 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는 차액의 20%까지,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는 차액의 80%까지 차등적으로 돌려준다. 이로써 채권자는 이자소득은 줄지만 원금 회수율이 높고 고위험 채무자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부실채권이 점차해소되고 고객층(채무자)의 선택권도 넓어져 공정과 경제적 안정이 기대된다.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 한부모 다자녀 지원정책

---

### [제안주제]

한부모 + 다자녀 가정에게 확대 된 한부모 지원 조건 적용

### [제안이유]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조건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부모가정이 다자녀 가정이라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조건을 가정했을 때, 만약 한부모 가정이 다자녀라면 일반 한부모가정보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체에 부담이 갑니다.

물론 다자녀 혜택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자녀 혜택도 일상에서 폭넓게 지원 되는 것이 아니라서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자녀 양육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게는 더욱 확대된 지원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확대된 지원조건을 예를 들면, 한부모+다자녀 가정에게는 좀 더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 임산부 배려석, 일반인도 앉을 수 있는 여기!! 캠페인 제안

---

### [제안이유]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져 있어야 한다. 이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왜 불만과 불편을 호소할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임산부 때문에 자리를 비워 놓는 게 맞는 걸까?

### [주요내용]

#### 무엇을 할 것인가?

임산부 배려석 공용화를 위한 “여기(가제)” 캠페인 제안.

#### 어떻게 할 것인가?

슬로건 (예시)

“당신은 항상 여기로”

“나 여기 있어요.”

“여기로 오세요.”

#### 캠페인 시행법

Step 1. 굿즈 소지자가 임산부석에 앉는다.

Step 2. 임산부가 오면 맡은 자리를 비켜준다.

Step 3.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

Step 4. 만일 굿즈 소지자가 임산부를 보지 못했다면, 임산부 또는 주변인들이 언제든지 상황을 인지시켜 양보될 수 있게 한다.

Step 5. 굿즈 판매금은 미혼모, 임산부,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 왜 하필 굿즈인가?

굿즈는 하나의 표식으로 언제든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 자리맡은 사람이란 것을 표현

##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가?

광고 1개월

SNS 1개월

굿즈 판매 지속적

- 시행 전 : 시행 1개월 전엔 SNS 및 대중교통 광고 시행
- 시행 후 : 2차 SNS 광고 추가 / 굿즈 판매로 국민들의 자발적 홍보 유도

## [재원조달방법]

### • 재원조달 A

: 국내 디자이너와 콜라보 굿즈 제작 및 크라우드 펀딩으로 국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캠페인이 일어나도록 유도

< 제작 아이템 > 마스크 / 에코백 / 폰케이스 / 스마트폰 그립톡 / 뱃지 / 팔찌 / 마킹테이프 스티커 / 의류 등

### • 재원조달 B

: 국가 또는 사회적 기업 투자 유치

판매금은 투자금 회수, 디자이너 지적재산권, 그리고 미혼모 또는 임산부 등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

## [소요예산]

지하철 내부 광고 : 3천만 원

지하철 승강장 광고 : 2천만 원

버스 외부 광고 : 5백만 원

SNS 광고 : 5천만 원

디자이너 지원비 : 1천만 원 (3~5팀 선정)

추정 합계 = 약 1억 3천 ~ 1억 5천만 원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 첫 아이를 위한 난임 시술비 무제한 지원 및 현실적인 난임 남성 시술비 지원

---

최근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첫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들의 나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의 경우 35세를 기점으로 난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령 여성의 난임 시술 건수도 늘어주는 추세입니다.

대체로 난임 시술은 자연임신이 될 확률이 높은 35세 이하보다 고령 여성들에게 절실한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난임 시술비 정책은 2021년 2회 추가되어 9회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100% 자비를 부담하며 그 이상의 차수를 진행하는 난임 부부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은데요. 둘도 셋도 바라지 않습니다. 첫 아이를 낳으려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의 횟수 제한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아나 교육에 대한 정책에 비해 아직 난임 부부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자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는 소득 규제에 발목 잡히고 국가 지원 시술비에도 여전히 연령의 규제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시술이 성공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난임 남성이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가 동시에 시험관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의 부족한 점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바로 잡으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부과

---

우리나라의 문화, 경제, 기술,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현실입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이에 따라 새로운 인프라도 서울에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상 이용객, 인력이 많다는 이유로 얼마 전 추진되었던 가칭 이견희 박물관이 서울에, K-바이오랩 허브가 인천에 설립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환 구조에서는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되면 가속화되었지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좋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 창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인천에는 법인세를 상향시키고, 지방광역도시권, 지방시, 군에는 법인세를 하향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업의 생리는 이윤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서울은 법인세를 현재에서 +5%, 인천, 성남, 일산, 하남, 구리, 화성, 안산, 부천 등 인접 도시는 +3% 높이고, 반대로 부산 등 광역시는 -2%, 지방 소도시 및 군 단위에서는 -5% 등 법인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 단순히 서류상으로 본사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시별 근무자 수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도출하여야 서류 상 본사는 진주시에 있으나 대부분의 인력은 서울에서 일하면서 부정하게 법인세 이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도로정비 및 대중교통 확충

---

지금 밖에 나가 한 시간 동안 교통시설을 이용하면서 몇 명의 교통약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때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합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4명중 1명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 그들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코로나로 바깥 활동 며칠 못하면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교통약자에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보도블럭의 턱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15cm 남짓한 낮은 턱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넘어서지 못할 높은 장벽이 되고 맙니다.

그가 자유롭게 사회를 향해 발을 디딜 때 크나 큰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많은 시설과 도로들이 예전에 비해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아 많은 교통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지하철, 배, 항공 등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설이 장애인들에게는 어느 누구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시설입니다.

사회적인 시설확충이 일어나 많은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나 교통 약자를 쉽게 만날 수 있고 차츰차츰 변화되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함께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위한 도로정비 및 교통 시설 확충을 꼭 이루어 주세요.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비대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개설

### [제안배경]

지역을 위한 사업을 발굴한다고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제안내용]

「비대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개설」

- 공개 토론회 개최 / 화상회의 진행 / 화면공유 및 자료공유 / 실시간 채팅 소통

### [기대효과]

- 주민 간에 소통 강화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
- 시간과 장소 구애없이 활동 가능
- 주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

### [기타]

「주민참여 지원금 지급」

공공기관 등에서는 발굴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데, 주민들의 경우에는 무급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소정의 주민참여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바라는 점]

각 지역의 시민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요. 각 지역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정책과 관련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화상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겠구요. 이를 통해 상호간의 소통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발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 저출산장려 지원금

---

매년 출생하는 아이들의 수는 적어지고 부산은 이미 초고령지역로 넘어갔습니다. 매해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정년을 넘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 막 나온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기도 전에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소리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 안해본 거라고 하기엔 20대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참혹합니다.

연이은 경기악화, 치솟는 물가, 코로나 상황에 취업실패 등등 수없는 요인들이 20~30대들의 출산, 결혼, 미래 등을 붙잡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경력단절은 둘째 문제라고 해도 현재 국가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하기 전에 다 소모합니다.

- 결혼장려금 신설
- 출산장려금 인상
- 채용조달방법 : 각 시, 도, 군, 구 공무원 연수비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수 목적이 무엇인가요?

실행되지도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도 안하는 정책과 일에 세금을 쓴다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연수가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면 각 시, 도, 군, 구에서는 이때까지 공무원 연수로 어딜 갔고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이 말하지 않았어도 밝혔을 것입니다.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지원 정책

### [제안내용]

만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청년들의 전세대출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 [제안이유]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취업난이 심합니다. 이로 인해 더더욱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에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지방에 있는 집의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 [주요내용]

- 대상 :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원 이하 단독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1.5~1.8%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 방법 :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간 수를 정하여 주택 청약처럼 정해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해준다.

### [소요예산]

80억(정확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미정)

### [자원조달방안]

불필요한 부서나 정책을 없애고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인다.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 개설

### [제안내용]

공공기관 등에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를 개설해 임산부가 오랜 시간 기다림 없이 우선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확보와 민원실과 인접한 곳에 민원인 전용 수유실 설치 임산부에 적합한 전용의자 배치, 남·여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개선방안]

-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를 개설해 임산부가 오랜 시간 기다림 없이 우선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임산부 배려를 통해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
- 임산부들의 민원이 불편함 없이 우선 처리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환경을 개선

### [기대효과]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는 임산부를 우선 배려해 민원처리 시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만족도를 높여 인구절벽 시대 임신과 출산 장려,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해야 한다.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변화

---

지금 정권부터 이전 정권까지 최소 10년간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재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하였고 21년도에 들어서 최저치까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산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약은 일정 금액 안에서 신혼부부가 복지정책을 고르는 정책입니다.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주어지고 출산정책을 골라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만약 출산정책이 모두 필요 없다면 금액을 출산용품 구입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면 과도한 지출은 방지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어서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제안도 꾸준히 받는다면 출산정책 바스켓이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복지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지금 예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려상

[재정/경제/복지 분야]

---

## 장애아이들에게 뛰어놀 공간을 주세요

---

장애아이들은 밖에서 뛰놀 수 없어요.

주위 시선도 그렇지만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며 안하무인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공부가 아니면 배울 수 있는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2년 이상 기다려야 순번이 올까말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애아이들만 받아 공부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현실이 막막하긴 하더라도요. 현대 이렇게라도 알릴 수 있어 다행이에요.

치료목록으로 운동이나 미술, 언어, 놀이, 인지 등등 좋은 쌤들도 계셨음 좋겠어요. 정부에서 더 나아가 국가에서 동마다 1개씩이라도 건물을 지으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제가 알 순 없지만 1년 안에 계획을 세우셔도 좋구요. 현재 놀고 있거나 공사가 중단된 곳을 국가에서 매입 후 진행하시는 방법도 좋을 듯 싶어요.

일반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장애아이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 살인, 성폭행범 인생 아웃

(형사소송법 개정 : 유기징역제 전환 및 사형제 실시)

### [제안이유]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매우 무르다. 범죄자를 봐주기 위해 고쳐진 법이다. 무기징역 아니면 법정 최고형량이라 해봐야 20년 언저리일 뿐이며 사형은 실시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흉악범죄는 갈수록 많아지고 살인, 성폭행의 재범도 많아지고 있다. 살인과 성폭행은 인격살인이며 피해자의 인격을 보호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이다. 범죄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의 기본 소임이므로 이 정책을 제안한다.

### [주요내용]

- ① 현행 무기징역제를 유기징역제로 전환하며 징역연한을 무기한으로 한다.  
(ex : 징역 100년, 200년 이상)
- ② 징역 50년 이상 확정된 자는 사형 실시가 가능하게 한다.
- ③ 살인, 성폭행은 초범이나 미성년이나 여부를 떠나 기본 형량을  
최소 징역 50년 이상으로 정한다.

### [소요예산]

법개정만 하면 되므로 소요예산이 필요없으며 오히려 교도소에서 밥을 축낼 범죄자가 줄어들고 사회에서도 재범률이 줄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 비용도 줄어든다.

### [재원조달방안]

재원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조달방안도 필요없다.



# 장려상

[정치/행정/사법 분야]

---

## 성범죄 2차가해 피해자 보호

---

1. 성범죄 형사 소송 시 기록 열람 등사한 피의자가 사건 관계인의 평온 및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더 중한 벌과 처분을 받게끔 올해 하반기에 법이 도입,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시급한 사안. 최대한 빨리 도입을 원합니다)

2.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들과 활동가들의 신변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혐오 범죄 및 스토킹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과 제도와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시급한 사안. 1년이내 시행 요망)

3. 유튜브에서 유명 방송인과 일반인을 저격하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서 돈을 버는 악성 렉카 유튜버들이 개인을 상대로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손해를 끼쳤고 그 과정에서의 방관자는 유튜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입니다.

혐오표현이 섞인 미디어가 세상에 나와서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등의 방송사를 보다 더 철저히 단속 하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 임기 이내)

4. 1인 여성가구 주택청약 가점제 및 우선순위 선발제를 도입 및 시행하여 보다 더 많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십시오.(향후 2년이내로)

##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비매품>

발 간 월 | 2022년 3월  
발 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Tel. 02)503-1114 www.nec.go.kr  
제 작 | (주)씹긱커뮤니케이션 02-334-7540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중앙동 2-3)  
TEL. 02)503-1114